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5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가. 하남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 삭제(안 제4조)
- 다. 실태조사에 관한 제도적 근거 강화(안 제5조)
- 라.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마.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일부개정안)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7. 17.(월) ~ 2023. 8. 7.(월) (21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경제 발전”을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업체를”을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지역건설노동자”란을 “지역건설근로자”란으로, “노동자로서”를 “근로자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5.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6.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 이

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건설노동자”를 “지역건설근로자”로 한다.

제4조 중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으로, “우선사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실시한다”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재”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하남시 내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 ⑤ 시장이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로 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정부 또는 시·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하남시”를 “제12조에 따른 하남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역(경기도)입찰대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경기도)입찰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 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제10조제2항제2호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건설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건설과장 하 정 태
	팀장 직위 · 성명	건설행정팀장 장 선 희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김 지 연 (790-519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지역경제 발전</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지역</u> <u>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u> <u>전</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역건설산업”이란 「 <u>건설산업기본법</u>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u>건설업과 건설용역업</u> 을 말한다.	1. ----- 「 <u>건설산업</u> <u>기본법</u> 」----- ----- ----- - <u>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u> <u>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u> <u>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u>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u>업체</u> 를 말한다.	2. ----- ----- ----- ----- ----- <u>공사, 용</u> <u>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u> <u>를</u> ----.
<신 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 <u>중</u> <u>소기업기본법 시행령</u> 」 제3조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
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하
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
량 증대와 지역건설노동자의 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
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
--- 근로자로서 -----
----- 사람을 -----.

5.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
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6.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이
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
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
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
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
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
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
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
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지역건설근로자-----

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
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 방지 등 건전
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지역건
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
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
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
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
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
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1. (생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
----- 사용-----
-----.

제5조(실태조사) ① -----

----- 지역건
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 연1회 이상 실시
한다. -----

-----.

1. (현행과 같음)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3.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
--

3.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제2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신 설>

<신 설>

<신 설>

위반 등 업체로 인정되는 경
우

4. 일시적인 하남시 내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미
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⑤ 시장이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 별표로 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⑥ 정부 또는 시·도 등의 실태
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건
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
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4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최

제7조(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분할발주)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지역(경기도)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

<신설>

중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
----- 제12조에 따른 하남시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분할발주)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경기도)입찰대상사업---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

	<p><u>의 사업</u></p> <p><u>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u></p>
제10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10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u>50퍼센트</u> 이상	2. ----- ----- --- <u>60퍼센트</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u>아니할 수 있다</u>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u>아니한다.</u>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14조(구성) ① · ② (생략)	제1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性)</u>

	<u>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u>
--	-------------------------------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제5조제5항 관련)

구 분	제출 자료	비고(자료출처)
1. 기술능력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근로기준법
	고용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2. 자본금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회사비치분 등)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국세청 홈텍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용자금 잔액증명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각 공제조합)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업종별 등록관청 등)
3. 시설및장비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비고 : 건설사업자는 상기자료를 제출 할 수 없거나 상기자료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1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

[시행 2023. 6. 20.] [법률 제1951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 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 하려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